중기청, 정책자금 금리인하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지원정책자금 금리가 0.5% 인하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최동규)은 오는 9월1일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종전의 6.75%에서 6.25%로 0.5%P 인하하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정책자금의 대출금리와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리간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어 금리를 인하하게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조치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창업 및 진흥기금 내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정책자금 일체로,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협동화자금, 입지지원사업자금 등이 포함된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그동안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1만 4천여 중소제조업체들의 금리부담이 연간 300억원 경감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지난 1월 대출금리를 7.5%에서 6.75%로 0.75%P인하 한데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인하를 실시 한 것으로, 이번 인하조치로 적용되는 정책자금 대출금리 연 6.25%는 9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 민원업무 대폭 개선

정부는 정부계약제도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대폭 개선한다.

재정경제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국가계약법령)과 회계예규와 관련한 주요유권해석사례를 부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약400여개)한다. 정부는 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코드화된 사례와 유사한 사항은 발주기관 및 민원인이 별도의 질의회신 절차없이 직접 이를 인용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모든 정부계약관련 민원질의를 1차적으로 발주기관에 질의토록 하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또는 민원인이 발주기관의 의견을 첨부해 재정경제부에 질의토록 하는 등 이 개선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로운 유권해석사항이거나 계약당사자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등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의 전문가들로 '정부계약예규심사위원회'를 구성,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중기청, 중기 경영자금 5,150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신제품 개발기술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천 150억원을 올 하반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제조업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사업 중소기업 중 사업을 시작한지 3년 이상 된 중소기업에 대해 원부자재 구매, 경영·기술혁신, 기술도입 자금을 업체당 5억원 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원조건은 8%금리로 대출기간은 3년이며 매출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중기청은 경영안정자금과는 별도로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사업을 시작한지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 창업자금 4천 850억원을 별도로 지원키로 했다.

창업지원금은 시설재 구입이나 공장구입 임차에 필요한 자금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대출금리는 연 8%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시설자금은 2년 거치 7년이며 업체당 5억원 이내다. 단 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청의 자금지원 취급 은행은 기업은행, 조흥은행을 비롯해 전국 12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문의(중기청 02-502-3843, 중진공 02-769-6603)

자동화정보투자 5% 세액 공제 전 中企로 확대 적용

정부는 현행 중소제조업종에 대해 적용하던 자동화·정보화 투자에 대한 5%의 세액공제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연구,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 공제비율은 기존 5%에서 10%로 높이고 수도권 지역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경제활력회복대책에 의하면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투자액의 10%를 감면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 대상업종을 과학 및 기술서비스 분야 등으로 다양하고 수도권내에서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와 전자상거래 설비투자도 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적용한다.

특히 정책자금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자금의 대출금리를 기존 6.5%에서 5.75%로 0.75P 인하하며 산업기반기금등의 정책자금의 금리도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은 특별설비자금대출을 신용보증기관 출연대상 대출에서 제외하며 정보통신등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큰 서비스 업종은 신용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지원을 강화하며 종합상사 대행 중소기업수출보험부보율을 높여 수출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전제로 각종 기업규제를 완화, 출자한도 초과액이 내년 3월 안에 무리없이 해소되도록 유도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도 조정한다.

中企 사이버무역 거래 '활발'

최근 세계시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소기업들의 사이버 무역은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전국 77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96년 개설된 '인터넷 중소기업관(www.smipc.co.kr)의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콰이어리 내도업체는 응답업체(758개업체)의 57.3%인 434개 업체, 월평균 내도건수는 3.1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해외 인콰이어리에 의해 실제 수출이 성사된 업체는 인콰이어리 내도업체의 21.2%인 92개 업체로 나타났으며 내도지역별로는 동남아(23.0%), 유럽(17.3%), 미국(15.7%), 중국(8.9%), 일본(6.0%), 호주(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제 반해 인터넷을 통해 국내 업체의 거래제안서를 받은 업체는 응답업체(743개업체)의 55.7%인 414개 업체이며 직접 매출이 성사된 업체는 44.9%로 해외보다 국내 거래 성사율이 높았다.

이밖에 인터넷 중소기업관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41.6%가 만족, 50.7%가 보통으로 답했으며 대부분(73.7%)의 업체가 주기적으로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중기관이 EC21등 유사사이트에 비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31.6%였으며 보통(57.1%), 불만족(11.3%)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소기업들은 인터넷중소기업관 홈페이지와 관련해 한글, 영문 외에 중국어 제작을 가장 필요로 생각했으며 홈페이지 유지보수 미흡, 홍보 부족, 업체간 교류부족 등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인터넷 중소기업관을 통한 수출계약은 8월말 까지 124개업체, 2,119만달러로 지난해 전체 68개업체, 4,337만달러에 비해 업체수에서 크게 늘어났다.

대기업-중소기업 현금결제 활성화 방안

정부가 대기업-중소기업 협력관계 발전방안을 마련한 데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이들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대기업은 핵심사업에 집중하고, 그 외 분야는 중소기업에 대해 아웃소싱과 분사화를 통해 조달하는 등의 전략적 파트너 모델로의 이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강조한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의 후속조치 일환이기도 하다. 이 같은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선 우선 하도급 거래의 오랜 관행이던 어음거래를 현금성 결제로 바꿔, 상호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게 정부의 인식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현금성 결제비율은 99년 34.8%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44.2%, 올 6월 64.3%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이를 더욱 채찍질하기 위해 현금성 결제의 일종인 기업구매자금에 대한 총액한도를 1조 늘려,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법인세 감면등의 세제지원을 올 2월 도입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신보 기보 지역 신보 등의 신용보증을 실시해 주기로 했다. 이들 신용보증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도 손쉽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중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시중은행 공동으로 전자외상매출 채권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는 대기업들이 결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고집하는 등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시행될 경우 서로 다른 은행간에도 전자외상매출채권 서비스가 가능하다.

정부는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술개발단계부터 이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오는 12월중 전경련-기협중앙회 공동 부품소재 산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공동부품 소재 개발에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 기업간 대금거래 금융지원 제도

▲기업구매전용카드=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카드수수료는 납품대금에서 공제)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 지난 99년 11월 도입됐으며 올 4월 현재 이용실적은 5조 735억원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을 결제하는 방식. 지난해 5월 도입됐으며 총액한도에 따라 작년 이용실적은 2조 3809억원.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납품업체가 물품대금을 어음이 아닌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구매기업은 일정기간 경과 후 대출금을 거래은행에 상환한다. 통신전용선 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방식으로 이뤄지며 올 2월 도입됐다. 지난 4월 현재 이용실적은 2940억원.

모터 美 수출에 고효율인증 필수

앞으로 국내 모터업체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 에너지자원부(DOE)로부터 고효율 인증(CC Number)을 획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이를 획득하지 않은 제품은 수출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고 유통시킬 경우 벌금을 부과 받는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미국정부가 지난 '92년 고효율에 관한 법령을 만들어 2001년 11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했으며,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 5일부터 이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국내 업체는 이에 대한 준비가 안된 상태라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국내공인시험 기관의 고효율 인증서가 미국과 상호 인정될 수 있도록해 미국에서 별도로 고효율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 고효율 인증을 획득하려면 국내업체가 미 국립기술표준협회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정 · 산 · 학 합동 전자무역 인력 육성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무역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9월부터 제1차 트레이드인큐베이터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지방소재 9개 대학에 인큐베이터를 설치, 대학 및 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에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을 접목시켜 기업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 공급 채널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트레이드 인큐베이터' 사업은 대학 3학년 재학을 대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해 무역실무교육과 지역내 업체에서 인턴쉽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무역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인턴쉽 과정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가능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기 이전에 사전훈련과정을 통해 양질의 무역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을 완화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에는 대학 내 무역 · 통상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9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과정에서 학교발전계획과 연계해 트레이드인큐베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선정된 대학에 인큐베이터실 설치에 소요되는 교육기자재, 무역실무강의와 관련된 강사료 및 학생연수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인턴쉽 실시 업체에 대해서도 소정의 실무수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큐베이터 출신 대학생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산자부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해외실무수습도 고려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무역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교수, 학생, 학교. 기업들을 연계해 보다 실질적인 전자무역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전자무역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와 함께 일반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복수입 원자재 세관검사 생략

정부는 제조업체가 반복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수출확대책의 일환으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예전에는 세관근무시간이 종료된 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사전에 임시개청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했으나 수출 자동 통관물품은 야간에도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했다.

또 관세분할납부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제조업체 확인서는 연중 1회만 제출하고, 이후에는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제조업체가 반복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제출물품 중 선적기일등이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우선통관하고 익일 정식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전 서류제출에 의하던 적재기간 연장신청도 사무실에서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전력기금 9,100억원 규모 전망

내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지원규모는 9,1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제2차 전력정책심의회(위원장 권욱현 서울대 교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 계획을 심의 ·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전력수요관리사업, 전력분야 R&D사업, 전력공익사업, 타에너지지원사업 등 4대분야로 구분했다. 또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발전설비 건설 및 설비능력 향상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과 기존 발전설비 수명연장 등 연구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지역 발전기는 한전이 추가 인수 운영토록 해 도서벽지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 조성사업의 기획, 관리능력 보강을 위해서는 전력산업 종합 통계 DB 및 전력기술정보 DB를 구축함과 동시에 해외 전력연구기관과의 기술 및 인적교류 등 국제협력사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심의회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올해안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사항은 8월말까지 기획예산처 협의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